

**태양·인성... 스 브루셀라병 전국 확산 비상**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의 한 축산농가에서 4월 7일 소 19마리가 브루셀라 병에 걸린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하지만 시는 아직도 이들 소에 대한 살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 시는 원래 브루셀라 병에 감염된 19마리와 같은 축사에 있던 5마리 등 24마리를 살처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는 살처분을 15일로 미뤘다. 지난 12일 열린 안성한우시장에 마칠 파장을 우려해 당시 살처분을 연기한 것이다.

이에 앞서 이 농가와 인접한 이모씨의 농가 등 2곳에서도 3월 25일과 28일 브루셀라 병이 연이어 발생, 사육하던 한우 270여 마리 중 61마리를 살처분한 사실이 확인됐다.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르면 시는 브루셀라 발생 시 해당 농가와 반경 500m 이내 농가에 대해 2개월에 한 차례씩 6개월간 모두 3차례의 혈청검사를 하고, 차량 이동 제한과 외부인 출입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안성시는 이런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성시 관계자는 “구제역으로 브루셀라 병 발생 농가에 대한 방역 활동을 제대로 못했다”고 말했다. 전남 담양의 한 축산농가에서도 3월 31일 브루셀라 병이 발생해 한우 150마리를 살처분했다.

브루셀라 병은 겉으로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 초기에 발견하기 어렵다. 암소가 이 병에 걸려 유산하거나 조산하기 전에는 감염 여부를 알기 힘들다. 전파력은 떨어진다. 공기 중으로 전파되는 구제역과 달리 브루셀라 병은 타액이나 분비물 등에 직접 접촉할 때만 감염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브루셀라 병이 사람에게도 전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라 주의가 요망된다는 점이다. 사람이 이 병에

걸리면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는 등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 그렇지만 치사율은 2%로 낮다. 정부는 구제역 역과 브루셀라를 각각 1종, 2종 가축전염병으로 관리하고 있다.

브루셀라균에 감염된 암소는 새끼를 낳지 못해 농가의 피해가 크다. 그 때문에 축산 농가에서는 정기적으로 검사해 브루셀라 병에 걸렸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경기도 축산과 동물방역담당 임병규 사무관은 “구제역 백신 접종 암소는 임신 초기에 유산하고, 브루셀라 감염 소는 임신 말기에 유산하는 점이 다르다”며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브루셀라 병에 대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우유업계 '이러디안'.. 성장동력 찾아라**

우유업계가 신성장동력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수년간 지속돼온 저출산의 여파로 우유·분유의 주된 소비층인 12세 이하 인구가 줄면서 시장이 정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4월 1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우유와 분유시장의 규모는 거의 정체상태다. 우유 총 소비량은 2006년 307만톤에서 계속 줄다가 2009년부터 다소 늘었지만, 1인당 소비량은 63.6kg이었던 2006년 수준을 여전히 밑돌고 있다. 업계의 총 매출도 몇 년째 1조9,000억원 안팎 수준이다. 분유 소비량 역시 1만4,000톤 안팎에서 큰 변화가 없고, 매출은 3,100억원에서 3,400억원 사이를 오가고 있다.

이렇다 보니 주요 업체들은 전통적인 우유·분유시장을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에 한창이다. 남양유업의 경우 커피믹스 시장과 함께 비타민 시장을 신사업 영역으로 상정했다. 지난해 말 선보인 ‘프렌치카페 커피믹스’는 출시 3개월 만에 올해 매출 목표액 100억원을 넘기면서 동서식품이 30여년간 사실상 독점해온 커피믹스 시장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김웅 대표

브루셀라		구제역	
소·돼지·개·사람	대상	소·돼지 등 발굽 2개인 우제목	
유·사산, 불임	증상	입술 등에 물집, 식욕 저하 등	
세균성 질병(법정 2종)	종류	바이러스성(법정 1종)	
감염 가축만 살처분	처리	반경 500m 이내 가축 살처분	
접촉(타액·분비물 등)	전염경로	공기 중 전파, 매개체에 의해 전파	
정기검사	예방법	백신 접종, 일칼리·산성제제로 소독	
60℃ 이상 고온에서 익히면 가능	식용 여부	유통불가	

는 "커피시장에 남양유업의 미래를 걸었다"고 까지 얘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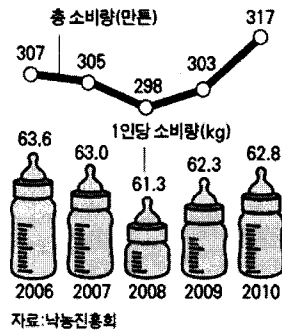
남양유업이 커피믹스 시장의 성공적인 안착에 이어 준비 중인 신성장 동력 2탄은 산모용 비타민 제품. 이는 연간 4,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일반 비타민 시장까지를 겨냥한 장기 포석이다. 자신에게 익숙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뒤 본격적인 영역 확장으로 나서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셈이다.

매일유업은 사업다각화 차원에서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냉장카레인 'MCC고베식당'을 론칭하는가 하면 와인 유통 자회사를 통해 샴포맥주도 수입·판매하고 있다. 또 일본 양식 브랜드 '만텐보시'와 담섬 전문매장 '크리스탈 제이드 담섬' 등을 여는 등 외식산업도 부쩍 강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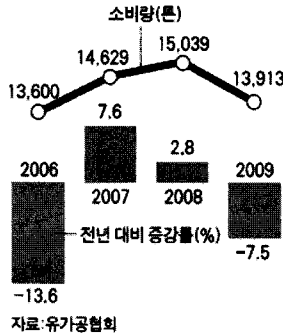
먹거리 이외의 영유아 시장에도 적극적이다. 자회사인 '0 to 7'의 경우 의료에서 시작해 스킨케어, 도서까지 비즈니스 모델을 점차 확장하고 있고, 매출 규모도 2007년 753억원에서 지난해 1,860억원까지 커졌다. 매일유업의 유통망을 적극 활용하면서 시너지를 창출한 셈이다.

빙그레는 올해 44조원에서 2020년 149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버산업을 택했다. 일본 식사배달업계 1위 업체인 엑스빈(X-vinn)과 손잡고 노인 전용 식사 배달 서비스 사업에 뛰어들 것. 전문 영양사를 통해 밸런스를 갖춘 영양식을 제공하는 사업을 통해 시장 선점 효과를 노린 것이다.

연도별 우유 소비량 추이



연도별 조제분유 소비량 추이



이에 비해 업계 1위인 서울우유는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2008년 프랑스 업체와 손잡고 치즈사업 분야를 좀 더 강화한 정도가 전부다. 2년마다 조합장이 바뀌는 운영체제의 특성 때문에 대규모 투자와 상당한 위험이 따르는 신사업 영역에 관심을 갖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장 자체가 정체된 만큼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필요하다면 간판 제품을 바꾸는 것까지도 염두에 뒀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축산업선진화방안 '세금 떠넘기기' 지적 제기돼

농림수산식품부가 발표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이 축산농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류근찬 의원(자유선진당)은 4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수산식품부 현안보고에서 축산업 선진화 방안의 내용이 정부정책의 개혁보다는 구제역 발생에 대한 책임과 수습비용을 지방자치단체와 축산농가에게 떠넘기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질책했다.

류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축산업 선진화 방안에는 '방역의무 준수에 따른 감액기준 마련, 방역시설 미설치 시 정책자금 지원 중단 및 배제, 지자체에 매몰보상금 일부 부담, 백신비용의 일부를 일정규모 이상의 축산농가에게 부담하게 함'과 같은 내용이 상당부분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지난 안동발 구제역에서 각 지자체들이 방역비용을 감당하기에도 벅차 정부에 지원요청을 했던 것을 잊었느냐"며 "벌써부터 지자체에 지나치게 부담이 가중된다면 앞으로 철저한 방역활동을 기대하기 힘들어진다는 부작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향후 가축전염병 발생 시 방역에 따른 책임을 물어 보상금을 감액한다거나 하는 패널티가 들어가는 정책은 가축전염병으로 무너진 축산농가를 희생불가상태로 몰아넣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EU FTA 대비 축산업에 2조원 더 투자**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한·EU FTA에 따른 축산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10년간 2조원을 추가로 투자하는 등 모두 10조9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농림수산물품부는 4월 14일 한·EU FTA 대책을 통해 기존의 한·미 FTA 대책 투자계획 4조7천억원, 축산업발전대책 투자계획 2조1천억원, 시도가축방역을 비롯한 계속사업 2조1천억원 등 8조9천억원에다 추가로 2조원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추가지원 사용처와 관련, 축산물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단계에 걸쳐 취약분야 지원을 늘릴 것이라며 생산성향상 6천300억원, 경영지원 3천200억원, 수급안정 2천500억원, 유통개선 7천800억원, 위생안정 300억원 등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 올해 축산분야 전체 예산액 1조647억원 가운데 한·미, 한·EU FTA 대응을 위한 총사업은 1조8억원으로 작년보다 583억원이 늘어났다고 소개했다.

농식품부는 이어 축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입증가로 피해를 보는 품목에 대해서는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득보전직불금 및 폐업보상금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한·미 FTA가 발효되지 않은 가운데 한·EU FTA가 이행되면 농어업생산액(2010년 10월 기준) 감소규모가 15년차에 3천172억원(연평균 1천87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분야별로는 양돈 1천214억원, 낙농 805억원, 양계 331억원, 쇠고기 526억원, 과채류 156억원, 수산물 112억원, 곡물 240억원 등의 규모로 생산이 감소될 것이라며 농산물 생산감소액 가운데 94%가 양돈, 낙농 등 축산분야라고 덧붙였다.

**구제역 보상금 시세 80% 낮아진다**

오는 7월부터 구제역 보상금액이 시세의 80%로 낮아질 전망이다. 4월 18일 농림수산물품부는 가축전염병예



방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제역 보상금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면서 살처분 대상이 예전에는 발생농가로부터 3km 이내 축산농가의 가축이었지만, 지금은 구제역이 발병한 가축만 살처분 한다"면서 "이러한 변화에 맞춰 보상금 지급비율도 낮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될 시행령은 구제역 보상금액을 현재 시세의 100%에서 80%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보상금 지급한도는 구제역의 경우 시세의 80%로 낮추겠지만 젖소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유지대(우유 생산 가격)는 현재와 같이 6개월치 보상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지난 1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시행시기(7월 25일에 맞춰 개정이 이뤄질 것)라고 농식품부는 덧붙였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르면 7월부터 아시아에서 주로 발생하는 A형, O형, 아시아A형 등을 예방할 수 있는 구제역 복합 백신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축산업 선진화 방안은 농가에 책임 떠넘기기"**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면서 축산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농림수산물품부가 '축산업 선진화 방안 지역 순회토론회'에서 최근 배포한 자료에는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차등지급 기준 ▲축산업허가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특히 지난 6~13일까지 실시한

경남·북, 경기·강원 등 지역별 토론회 자료에는 없던 내용이어서 주목 받고 있다.

선진화 방안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농가에는 살처분 보상금을 최대 70%까지만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는 신속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100% 지급하고 있다. 또 생계안정자금도 농가당 사육 규모를 감안해 차등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살처분 보상금에 대한 국고 부담 비율도 현재 100% 중앙정부가 부담하던 것을 지방정부에 30%를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살처분 보상금 지급과 관련, 방역의무 성실이행 입증 책임을 농가가 하도록 변경할 예정이다.

도입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축산업 허가제와 관련, 정부는 2012년부터 ▲한우·젖소 50마리 ▲돼지 1,000마리 ▲닭 3만마리 ▲오리 1만마리 이상 농가부터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허가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가족관리 및 방역 등 관련규정 이행점검 후 재허가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이 같은 세부 내용이 알려지자 축산업계는 “축산업 허가제를 강행하고, 5년마다 재허가를 하겠다는 것은 민원 발생 등을 핑계로 축산업을 강력하게 규제하겠다는 속셈”이라며 “특히 방역의무 입증책임을 농가에 전가하고, 양성축 발생 농가는 보상금을 70%까지만 지급하는 것은 신고를 음성화할 우려가 크다”며 강력 반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자료는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세부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논의중인 것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은 지역별 순회토론회 결과와 4월 20~21일 개최된 정책자문단 워크숍 등을 참고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납유처 이탈농기 많아” 유업체 경영 지원

지난 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원유부족사태로 인해 유업체들이 쿼터제한 해제, 입식자금 지원 등 각종 지원 대책을 내놓는 등 낙농가들이 갈수록 귀하신 몸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다수의 낙농가들이 쿼터값 하락으로 쿼터 구입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납유처를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유업체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실제로 지난 4월 16일 경기도 화성에서는 납유처를 변경하려는 낙농가를 사이에 두고 기존 유업체와 신규 유업체간 몸싸움이 벌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비단 이 목장뿐만 아니라 낙농진흥회 농가는 물론 중소 유업체에 납유하던 낙농가들은 납유처를 이미 바꿨거나 바꾸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유업체들은 자사 농가 이탈을 막기 위해 각종 젖소 입식 장려금을 비롯해 연간총량제 도입 등의 정책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낙농진흥회를 비롯해 그 동안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 왔다는 인식이 높은 유업체의 낙농가들이 납유처를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

특히 납유처를 변경하려는 대다수의 낙농가들은 기존 납유처의 쿼터값이 폭락함에 따라 자산가치가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하면서까지 납유처를 변경하려는 것은 그만큼 기존 납유처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는 반증이다.

이와 관련 한 낙농가는 “원유가 남아돌 때는 쿼터 삭감 등 불이익을 줬던 유업체들이 막상 원유가 부족하니 낙농가들 단속에 나선 것이 더욱 분통이 터진다”라며 “지금 당장은 원유가 부족하니 이것 저것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앞으로 수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유업체들의 태도가 바뀔 것”이라며 유업체들과 대등한 조건에서 원유를 생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